南北韓統合과 国家形態・國家體制問題

---分斷國 統合類型分析을 중심으로---

權寧星*・申字澈**

제 1 장 序論 — 統一과 法 —

1. “사회주의권의 혗체와 개방”으로 특징을 수 있는 최근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비상한 전환으로 인해, 이제는 統一이 단순한 “理想”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實踐”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통일논의는 통일문제를 주로 “政治의 問題”로 파악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의식과 유리한 통일문제가 정책결정기관의 政治의 決斷에 따라 수시로 차용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特定政權의 정체적 도구로 남용되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남북의 통일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동시에 이것이 “economic的 問題”이고 중국적으로는 “法的 問題”라는 점은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즉, 統一의 效率性 —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정치적 비용이나 통일에의 한 접근방식으로서 경제교류 등의 문제 — 이라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통일에 관한 어떤 정치적 결단을 法의 論理로 구체화시키게 규범적 측면에서의 보장을 담보하는 측면이 중요한 논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정치적 공세나 무력의 사용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平和的 含意”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통일이 전통주의적인 확립화가 아니라 “個人의 自由와 人權”을 취해보는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통일은 그 法의 側面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Mirkine Guzetévitch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平和의 그칠인 國際法과 自由의 基本権의 懲罰”이 일차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는 법적 기초가 될 것이고, 나이아가 세부적 사안에 있어 行政法 기타 私法분야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법률문제가 통일과 관련하여 새로운 점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2. 본고에서는 통일에 대한 이러한 法의 側面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중대 통일논의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國家形態와 國家體制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남북의 통일국가체계에 대한 前이론으로서 “國家와 國家形態・國家體制”의 문제(제 2 장), 기존 분단국가 내지 최근 통일국가의 國家形態・國家體制에 대한 비교검토론으로서 “統合類

*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教授
* 서울대학교 大學院 法學科 博士課程・法科大學 助教
형"의 문제(제 3 장), 통일을 향한 "이단의 집단주의"에서 제시된 각각의 국가형태·국가체계문제(제 4 장) 등이 논의의 주된 내용이 될 것이다. 다만 남북의 통합상황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 — 국제법의로서는 한반도 내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하지만(1) 헌법의 차원에서는 1개의 국가가 존재할 뿐이라는(2) 국제법과 헌법의 극단적 — 예를 들어 남북의 관계는 국내외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인 것이고, 따라서 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국의 집단사의 기여한적·국가령의 시각을 함께 검토하여야 통일국가형태·국가체계에 대한 올바른 규범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3.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희망의 앞가치 웅이에 대한 개념규정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우선 "국가체제"란 용어는, 남북의 통합과 관련하여 "국가(state)"에 대한 논의와 "체제(system)"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선택된 다. 한국의 사회·경제체제의 상호 밀접한 관계는 밀로 전나 아프리카, 세제와 이념을 달리하는南北의 경우 그 통합에 있어 "국가"의 문제와 "체제"의 문제는 분리하여 따로 논할 수 없는 상호의 것이기도 하다.

(2) 통일에 관련한 대부분의 논들은 아직도 "남북한"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은 곧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대한민국에 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吸収統一"을 순연중에 전적으로 원용이되고, 따라서 남북간의 거리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통합방식을 검토한다는 시각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용어로 보인다.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복기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범위설이(이하 남북합의서라 약칭)"가 발효된 지금, "남북합의서"에서 입각하게 되는 "남북한"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3) 한편, 우리가 지향하는 바 "統一(unity)"의 개념에 관해서는 각각의 통일방안만

---

(1) 국제법에서 국가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능력은 개별국가에 있는 것이어야 할 때, 대한민국과의 "修交国" 수가 149개국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修交国" 수가 108개국이며 동시교육교수 수가 94개국인데 비해(1991. 1. 1 현재), 저자도 국제법에서의 "南北사의 관계"는 차치하여도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할만한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한반도의 개별적(제 3 조)은 한반도 내에 대한민국 지역의 국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남북은 UN등가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서로의 국기성을 충성한 것으로 보다는 것이며, 더욱이 북한이 국기자극을 "超國家的(supra-national)" 기구가 아닌 "政府間(inter-government)" 기구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국기의 수용은 갖추지 않는다. 최근의 "남북사의 해체와 복기 및 교류·협력에 관한 범위설이"도 전문에서 "……啓発사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라는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3) 또한 이 용어는 남한과 북한의 각기 상호 상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로 대립국민단을 상생하고 있는 국기체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다만 북쪽에서도 " 국가가 남한의 용어에 의하여 "남조선"이나 "공화국 남반부"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 이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과 "조선반도"란 용어는 남과 북에 의해 제작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THE KOREAN PENINSULA"란 지리적 영역에 대한 양측 용어사용의 관리형상도 국방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일반은 "남반도"라든 용어를 쓰기로 한다.
제 2장  국가의 본질과 국冢形態・國家体制

“국가(state: Staat: E’tat)”가 파편 무인일자의 경제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개별과의 관점발방
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라는 단어가 갖는 소박한 뜻의 의미로부터, Marx-Engels
에서 비롯된는 『政治形態學』의 "国家論"(5), 『社會學적 人類形態의 角度로서의 國家론"(6), 나아가 포스트

(5) "統一" 狀態 즉, “完全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単一主權國家・國民統合・生活空間의 "統一.라
法秩序와 並行統一"의 4개 요소를 갖추어야 하며, 이에 못미치는 것도 통일은 "形式의統一, " 名目上の
統一, "法形式上の統一"로 보는 견해(李相禹, "南北韓統一政策의 理論構造比較：「民族和
合」과 「階段開争」의 對比", "統一韓國의 構成為理念・環境과 政策의 努力", 박영사 1987, 101쪽):
목표로서의 통일은 國家統一에서는 한국과 그 부속도시에 하나의 構成為 하나의 政府가 수
립되는 圖一主權國家의 情況이고, 民族統一에서 보는 정치・經濟・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서 혼인의 "한민족통합"가 형성될 상을라는 견해(梁鈴穎, "南北韓統一政策, 民主統一論・統一
問題一, 통일연설(1992, 29쪽); 法의 분명한 약은 통일을 내내의 것으로 "主權"를 상정하
는 하나의 「政府」・하나의 「法體制」설에 남과 북이 꼭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崔大輝, "統一
의 法的問題, 法評(1990, 116쪽) 등.

(6) 統合理論의 주월 관심은 나뉘어 있거나 혼란해 있지 않은 민족통합이 하나의 共同體로 만들려는
과정과 통합체가 된 후 그것을 유지하는 방법에 있다(李相禹, 國際關係理念, 박영사 1987, 317
-318쪽). 따라서 그것은 국가와 같은 政治共體의 문제에 한정된 논의만큼은 아닌 것이다. 대
표적인 통합이론으로서는 D. Mittrany의 機能主義, C. J. Friedrich의 聯邦主義, K. K. Deutsch의
多元主義, E. Hase의 新機能主義 등을 들 수 있다.

(7) "國家"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영토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정치조직, 또
는 그 단체, 영토・國民・주권이 그 개념의 主要소입(신기원・신용창 편저, 세우리북 出版사
1991, 381쪽)"이라고 규정되며, 이는 Jellinek적인 "국가 3要素설"에 상응하여 국가 개념을
정의한 점이 동일하다. 한편, "state" 내지 "State"라는 단어는 이탈리아 루체시아까지 그
권역가 건물의 온라인을 하는데, Machiavelli는 1513년 그의 저서 "Principe"에서 "사람에
해당하는 "체"로서 모두 국가(tutti gli stati)의 모든 권한은 공화체이거나 공주체이자라고
주장을했지만, 여기에서 "국가(state)"라는 단어는 구별되는 통합체를 가르기 위해 사용된
주요ensation 개념이었다고 한다(I. Isensee, "Staat und Verfassung", Isensee/Kirchhof, Handbuch
"하나의 順分대로 정치적으로 조직받고 일정한 영역을 점유하는 사람들의 총체(A body of
people occupying a definite territory and politically organized under one government)로
규정되고 있는데, 그 개념요소로는 "사람들의 총체(A body of people)・일정한 혹은 고정적
인 영역의 점유(occupying a definite/fixed territory)・주의 경제적으로 표현되는 "주권(sover-
egacy)" 내지 "주권적 권한(sovereign power)" 등이 제시되고 있다 (Black's Law Dictionary,

(8) Marx-Lenin주의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국가는, 한마디로 "통계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신의 계급
저배를 관절시키기 위하여 역대적・특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합 형태의 정치적 권력기구(사
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사전, 풀빛 1990, 62쪽)로 규정된다. 원래 Marx-Engels는 "국가"
모리니즘의 "반국가적 국가론"이 이르기까지 국가라는 현실 세계의 다양한 단면이나 국가론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유형의 국가론을 여기서 정토한다는 것은 가능하며도 않았거나 파악하지도 힘들다. 본장에서는 종래 헌법 및 국제법에서 주장하는 "국가"의 본질과 "국가 형성"에 자"적 특성"의 문제를 접근하고, 단계적있이라는 실정적 필요성에 입각하여 독일 · 중국 · 한국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는 국가만을 1차로 들어 중심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다.

1. 국가의 개념과 본질
(1) 헌법과 국가
"국가에 관한 개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Von Staate aber gibt es keinen Begriff)"고 이미 약 2세기전인 1809년 Adam Müller는 저작하였거나, "정치학(Beschichlichkeit)"을 갖는 "현실적(Wirklichkeit)"로서 국가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을 정의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개념으로 개념규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헌법과 윌리언 국가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형태적(Identypus)"에 불과하며 "일반적국가학의抽象"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현대적 형식의 국가"라는 " 스스로"는 그 헌법규정에 의해서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완성되는 것이다. 국민은 헌법의 제정과정에서 "그들의 국가의·민족의·단일성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한도내에 헌법은 국가적 단일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 역으로 국가는 헌법에 대한 의무적체인 동시에 헌법의 보장으로서 헌법을 부양하는 수단이 된다. 결국 국가와 헌법은 상호 관계과 목표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11)

한편 우리 헌법은 Jellinek적 "국가 3요소설"에 입각한 경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2) 국악과 국가

“국악적 통합체(Völkerrechtsgemeinschaft)”는 한려와 의미를 가지고 소속되는 “국악적 통합체(Völkerrechtssubjekt)”의 개념정서로서 “국적”은 “국악적”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의(praktisch)” “憲政的(Verfassungsneutral)”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현대국제사회의 이데올로기적 분열상황으로 인해 무엇을 “정당한(legitimat)” 것으로 간주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악의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고, 따라서 “정당성”문제보다 “ 현실적” 즉 사실적 지배”의 문제를 중시하는 Jellinek적 “3요소설”이 국악법적 국가개념의 정의에 강한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이다.

국가의 정의와와의 관계에 관한 1933년 12월 26일의 “Montevideo판결” 제1조는, “국악法人가”로서 국가는 (a) 영속하는 (permanent population); (b) 정한 영역(a defined territory); (c) 정한 정부(government); 그리고 (d) 타국과 국악적 관계를 갖춘 수 있는 정책(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the other states) 등의 4요인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3) 이러한 국악법적 국가개념은 개별 국가의 국악과 무관한 점이 그 특징이다. 즉 국악법의 협정적 전통이나 국가형태의 근본적 변경은 국악법상 당해 국가의 “통일성(Identität)”과 “継続性(Continuität)”을 점해치 않는다고 한다(국악継続性의 원칙).

2. 국가형태론적 국악조직의 구별


(12) "...아울러의 전반에도 불구하고 국소법의 제1조, 제2조, 제3조가 각각 주권, 주권권, 전권의 조각으로서 작태학의 국소법조직에서는 참조하고 있나, ...국악의 '본'은 이들에 요구하며, ...한편 그들의 '국악조직이란 정의 국악은 없는 영역, 주 전권권의 존재는 지배의 '통치'를 실현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국안의 주권'의 고유자이고 '통치가 되는' 전권권이 실현되고 따라서 주권권의 중요성은 '통치'의 '통치'의 그 독립성에 근거한다. ..."[국악조직 1985, 188쪽]

있었다. 우리의 경우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불 때 근대국과 공화국의 분류는 무엇인가 하면, 그다지 단고한 문제에 대한 흥미적 차원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14)

한편 국제법의 전치에서는 보다 다양한 국가형태의 분류가 행해지고 있다. (15) 종래 주권국(Sovereign State)과 제도주권국(Not—full Sovereign State), 허도국가(Federation; Bundes-estaaten)와 국가연합(Confederation; Staatenbund) 및 "The British Commonwealth", 부속국(Vassal State)과 보호국(State under Protectorate), 중立국(Neutralized State) 등의 분류가 국제법상 허용되어 왔다. 동일과 관련하여 보다 주의 깊게 검토되어야 할 국가형태는 허도국가, 국제연합, 보호국, 중立국 등이지만, 국제법상의 이러한 국가형태분류는 19세기 유럽과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실국가에 있어 이들 국가형태가 점차적으로 명확한 것은 아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태가 주로 정치, 사회의, 국가적 조건형태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국가체제(Staatssystem)"는 국가적 개념과 목표(민주주의, 민주주의 등), 국가적 의미의 형성원리(국민주의적 원리, 인민주의적 원리 등), 국가 권력의 (분권주의, 집권주 등), 세계관(전대주의, 상대주의 등) 등을 충합하는 국가주의의 체제를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그에 있어서 그 정체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의 정서와 체제는 충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주의국의 BELA

국가는 "자본주의, 다른 재정의 반향을 진정하고 자가의 정치적자체를 유지하고 공고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치적권력기관(정치사건, 사회과학동반, 평양 1973, 78쪽)"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본질의 속성이 관해서는 "어떤 국가가 아니라 그것은 모든 통치체계의 피통치체계에 대한 독재이고, 그 근본적 표자는 통치체제내부 혹은 동등자체계에는 민주를 실행하고 피통치체계에 대해서는 독재를 실시한다는 데에 있다(杜喜臣 主編, 憲法學辭典, 山東大學出版社 1989)"고 한다.

또한 국가체계에 대해서는 "국가가 독립·자주적으로 자신의 내외사무를 처리하고 자신 의 국가적 연락 및 대외적 독립권과 내외적 독립권 및 첨임을 방지하는 자위권을 포괄한다(憲法學辭典, 517쪽)"고 설명하고 있으며, 국가체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체제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성격입상에 전면적 연관수지과 그 상등의 공택을 포괄한다. 미래는 오늘 우리나라 럼토인 공화국이 변화발달방향을 강점하고 그것을 지들의 심문지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공화국의 영역에 대한 자주권을 완전하게 유지하고 있다 (정치사건, 81-83쪽)"고 서술하고 있다.

(14) 법학회와의 연구에 있어서의 해석에서, 법학은 사회로의 접촉, 박영사 1989, 373-418쪽 소재 "법관" 부분을 참고할 것.
(15) 국제법학적 주장으로서 국가에 대한 국내정의, 분류의 상세한 내용은 R. Jennings・A. Watts (edit.), 앞의 책, 119쪽 이학 참조.
한편, 국가는 공용기관과 이래가 되어 있는 국가와 구성 형태에 따라 군주제와 공화제로, 공용기관의 지방자치이 형제가 되어 있는 국가구조에 따라 단일제와 연방제로, 국가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는가는 정치제도에 따라 민주주의제도와 전제제도로 나뉘는데(정치사질, 595쪽)”라고 설명하면서, 한편, 국가를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단일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의 지주권이 하나의 국가주권기관에 의하여 실현되는 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제 남북조선인민의 전방한 의사를 대표하며 조선민족의 리익을 응호하는 유일한 단일체 국가이다”라고 한다(정치사정, 252쪽)。

벤치판에 주관에 관해서는 “나라의 언어의 실제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주권기관과 그의 조합에서 발달한 정부의 주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집행하는 정원들과 이루어진 국가”로 보고 있으며, “전제개발국가의 성질 있는 국가를 이루는 국가를 떠나는 다른 바, 국가의 편익은 국가들간의 조약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통행이다”라고 한다(정치사정, 331쪽).

제 3장　통합의 용어과 국가형태・국가체제

독일통일 후의 통합을 목표하면서 우리들은 “신속한 통일”의 추구보다는 오히려 “바람직한 통일”의 추구가 더 중요하며,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What to do)”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How to do)”라는 통일의 그라운드가 더욱 중요하다는 사설로 개방하게 되었다. 여기의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수로서는, 통일이 예의바른 상식에서 사람의 의견을 가능한 한 합하고, “건재적”로서의 모든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분단국이나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국가의 예를 충분히 알기 바란다.

양립의 중심부며 본장에서는 “국가형태・국가체제”의 면을 주제로 하여 가장 최근에 통일을 성취한 독일과 예멘, 그리고 아직 통일을 추구하는 도중에 있는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보다 입체적인 비교를 위해서 분단전후 및 통일전후의 제반사항, 즉 국가관계・정치・경제・ 군사・교통・문화 등 각종 변수들도 논의하고자 하였다. 또 이들 국가의 통일문제를 다른 기존의 논의 틀이 바철하였던 바 오히려 혼란을 피하기 위해, 통일에 이르는 방식과 “통일후의 국가형태・국가체제”를 임의의 구분한다는 관계에서 논의를 개방하였다.

1.　獨逸(17) —　條約解約　吸引統一/聯邦國家　—

(16)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통합성한 예멘 유럽공동체나 아랍연합 같은)을 검토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나 바람직하지도 없다고 본다. 독일・예멘・중국의 세 경우는 그 분단이 이전에 이베로카리아의 태평양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민주・공산 양계의 대립을 결실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달리 비교가능한 요소가 있고 따라서 검토의 가치가 더욱 높다고 생각한다.

(17) 독일과 통일에 관한 국내 법학자들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절에서는 다음과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다.
(1) 獨逸分斷 이후의 狀況

① 獨逸분단과 兩獨關係


“동서독 기본조약의 合憲性 여부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i)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역시 독일에 속하므로 독일연방공화국과의 관계에서 “外國(Ausland)”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ii)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국제법상 의미에서 하나의 “國家(Staat)”이라고 그 자체 국제법의 주체이지만 이것은 독일연방공화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국제법적으로 承認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고, iii) 여전히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의 두 부분 사이에 체결되었다는 특이성을 지나는 이 조약이 Bonn기본법 前文의 “獨逸再統一命題(Wiedervereinigungsgebot)”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19)

② 東獨의 民主化運動(20)


(18) 동조약 제1조는 “外交關係”라는 용어 대신에 보다 밀접한 “善隣關係”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東獨은 국제법으로 직접 승인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實質의 關係의 발전이란 뜻으로 이해하였다.
(19) BVerfGE 36, 1-37권
(20) Maunz-Zippelius, 앞의 책, 417-420면 참조.
국가 통일과 국가形態 • 国家體制問題 — 7 5 —

—國家聯合—聯邦制統一—”통일방안 “10개항(Zehn—Punkte—Programm)”을 제시하였고 이
여 1990년 2월 1일 Hans Modrow 총리는 "4단계 聯邦制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1989년 12월 8일 통독에서는 "圓桌會議(Runder Tisch)”라 불리는 정치 단체가 새로
이 결성되어 1990년 2월 16일 "暫定의 東獨基本法(Vorläufiges Grundgesetz der DDR)”을
통과하였다. 이 문서의 前文에서는 통독이 "法治國家의으로 조정된 民主的・社會的 聯邦國
家(rechtsstaatlich verfasster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라고 명시했지만, 이
는 제3권의나 국민의회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憲法草案(Verfassungsentwurf)”에
불과한 것이었다(동년 2월 18일 선거가 실시되어 국민의회가 새로이 구성됨). 1990년 6월
19일 통독의 國民議會(Volkskammer)는 "憲法基本原則法(Verfassungsgrundzügegesetz)”을
2/3이상 과반수로 채택하였다. 이에 의하면 통독은 "自由的・民主的・聯邦制的・社會的・
生態學的으로 지향된 法治國家(freiheitlicher demokratischer föderativer sozialer und ökologi-
isch orientierter Rechtsstaat)”이며, “私有財產權・契約自由・團結權 등은 보장되고 국가와
시민은 環境保護義務를 진다”고 한다. 이처럼 통독은 민주주의의 진행으로 國家形態 내지 國
家體制의 면에서 서독과 서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바(Bonn기본법 제20조 참조).
이 "憲法基本原則法”을 비준근거로 후술하는 通貨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통독은 정책 서독
에의 편입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2) 統一을 위한 條約締結

통독의 민주화 혁명성취로 양국간에는 통일을 향한 전국이 더욱 밀려오고 통일을 향한
統一의 節次로서 각종의 條約이 체결되기 시작한다. 이들 조약은 두개의 "國家”간에 체결된
"國家條約(Die Staatsverträge)”이므로 국제법상 조약에 타당한 유효한 법원칙들이 적용
되어 진다고 한다. 이러한 조약들로서는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1) "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創設에 관한 條約(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21) 공법학계에서는 Staatstragvertrag을 통한 "國家條約”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條約는 원래 國際法
人格으로서의 國家間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折撮에서는 단순히 "條約”이라고 번역하였다. 国際
法학계에서는 "條約”이라는 번역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22) "제1조 약” 또는 "通貨條約”이라고 통칭되는 이 조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약당시자는 1989년 가운데 "독일민주공화국(DDR)”에서 평화적・民主적 혁명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힘입어…독일의 통일을 지체없이 자유롭게 인수할 것을 결의하고…社會的 市場經濟を
통독에도 도입하여…通貨・經濟・社會保障同盟의 성공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는 데 향의한다(前
文). 서독마르크와 화폐로 단일화함으로써 "通貨同盟”을 형성하며, 철저적으로 통조마르크는
서독마르크와 1:1의 비율로 교환한다(제1조 제 2항, 제10조). "經濟同盟”의 기초는 社會의
市場經濟秩序로서, 이는 극심 사회재생산・經濟成長・自由民主 가격체계 그리고 정책적으로 노
동・資本・재정 및 음영의 완전한 자유이동을 통하여 결정된다. 또한 이는 환경보호의 필요성
을 고려한다(제1조 제 3항, 제11조제16조). "社會保障同盟”은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에 상응
하는 노동법질서와 농약과 사회정의에 기초한 포괄적인 사회보호제도를 통해 결정된다(제1조
제 4항, 제17조제25조). 衛生은 平和의・民主的・聯邦制的・法治國家의인 社會的 기본질서
를 양측하며, 聯合的 社會主義의 社會政治體系에 관한 통화협정 가운데 이에 저촉되는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나(제2조), 聯合・政治・社會保障同盟의 실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통독의 發展조정 가운데는 自由主義의・民主聯邦制의・民主社會主義의 原則이 적응된다(제4조).
ii) "독일 통일의 실현에 관한 단일 조약" (Vertrag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1990.8.31 체결, 1990.10.3 발효)" : 이 조약은 1990년 9월 20일 독일의 "독일통" (한성 42, 반대 47, 기권 3)과 동독의 "독일 통" (한성 299, 반대 80, 기권 1)을 통과하였고, 독일 독일의 각 "독일 통"과 "독일 통"의 동의를 거쳐 "독일 통"의 정부에서 통일을 하였다. 그러나 이 조약은 독일의 "독일 통"과 동독의 "독일 통"의 동의를 거쳐 "독일 통"의 정부에서 통일을 하였다. 또한 독일의 "독일 통"과 동독의 "독일 통"의 동의를 거쳐 "독일 통"의 정부에서 통일을 하였다.

iii) "독일 통일의 단일 조약" (Wahlvertrag) : 독일의 "독일 통"과 동독의 "독일 통"이 통일을 하였다. 이 조약은 독일의 "독일 통"과 동독의 "독일 통"을 통합하여 동독의 "독일 통"을 하였다. 이 조약은 "독일 통"과 동독의 "독일 통"을 통합하여 동독의 "독일 통"을 하였다. 이 조약은 "독일 통"과 동독의 "독일 통"을 통합하여 동독의 "독일 통"을 하였다.
GRÜNE 등의 경영이 항쟁 세력의 재조직에 기여하였고 재조직판고는 현 행법상의 불합의적 침해를 이유로 이 조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eine Verletzung der Chancengleichheit der zur Wahl antretenden Parteien). 이에 따른 1990년 10월 8일의 연방선거법 개정으로 5% 지지 조항이 삭제되었을 때의 10차례 이상의 총재화를 보기로 나아 동부와 서부지역에 분리적용하게 되었다.


(3) 獨逸統一方式에 대한論争

① “編入”이나 “制憲”이나( Beitritt oder Verfassungsneuschöpfung)

독일의 통일방식에 관한 기법은 1987의 傳信義務規定이 제23조에 의한 방식과 기본법의 時間的効力範圍規定인 제146조에 의한 방식간의 논쟁이 있어 왔다. Bonn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방식이라면, “이 기법은 우선(zunächst)… 여러 생의 영역에 적용된다. 독일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編入(Beitritt)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吸收・早期統一方式”로서, 보수적 학자와 관료・CDU/CSU・동독의 Allianz für Deutschland와 Bund freier Demokaten 등 右翼陣營에서 주장하였던 통일방식이다. 이는 가능한 따로 통일에의 トゲ를 빛을 베이 것으로 Bonn기본법에 갖는 正当性과 憲法의合理性를 고려할 데 그 곡이 세운 헌법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또한 이 방식은 EC의 통합 을 이용하여 하고 외교정책상의 이익과 신뢰성 확보에 유리하며, 그 외에도 소련의 동달적 사태변화에 대비가 가능하고 시작점을설시의 법적 토대로 신속히 마련할 수 있으며 동독에서 서 독일에 이로 인해 필요를 도저히 방지할 수 있는 등 사정이 있었다 한다.

한편 Bonn 기본법 제146조에 의한 방식이라면, “이 기법은 독일독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制定한憲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실효한다”는 규정에 의거한 “漸進的・對等統合方式”로서, 진보적 학자 및 SPD와 FDP・동독의 SPD・PDS・Bündnis90/GRÜNE 등 左翼・在野勢力이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는 농축도 동일국가 구조에 대한 농축한 참여자로서 요구가 있다는 점, 무 znal의사의 직권으로 통일을 쟁취한 동독의 자존심을 고려할 필요성, 건
국민의 공개토론이 없이 제23조에 의해 통일을 합법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걸, 기본법 제22조의 기본정신은 양독국민의 대등한 결정을 요구하며 제23조의 방식은 동족을 식민지화하는 것이라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② 新憲法에 대한 考慮
1990년 3월 18일의 총선결과 동독국민의 다수는 제23조의 방식을 지지하였고 이에 따라 급속도의 吸收統合이 진행되었으나, 조기통일 후유증과 각종의 문제제기로 인해 뒤늦게 제146조의 적용여부가 논의되고 있다(특히 동독국민의 지위회복과 민주주의原則再考의 관점에서).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의 발효 후 기본법 제23조는 사제되었고 제146조는 “독 일의 자유와 통일이 이루어진 후 독일독립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으로 개정되었 거나와(24) , SPD・GRÜNE・Bündnis90・PDS 등에서도 신헌법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CDU/CSU・FDP 등에서는 일정정도의 헌법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은 특히 民国民投票에 의한 승인과 관련하여 차기선거의 경로로 여러가지 논의가 제기되기도 한다. 한편 통일 이후에도 제146조를 존중이하려는 偉法制定權力의 행사로 통한 新憲法制定의 가능성을 낳기고 있는 점과 관련하면, 제146조는 “新憲法으로 가는 다리(Brücke zu einer neuer Verfassung — Martin Krielle)”라는 표현도 나오는 반면, 동족가 기본법의 정당성과 약화시키고 헌법에의 정신을 약화시키므로 사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추가될 사항으로는 社會의 基本權의 尊厳・國民投票權의 강화・環境保護・國民들의 民和의 共存에 대한 東徳 Dez传统상상주의의 생활과 사용의 급증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4) 評価와 展望
基本法 제23조에 의한 吸收統一의 당연한 결과로 통일 후의 독일 국가형태 및 국가체제는 종전 서독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기본법 제20조에서 도출되는 통일독일의 국가형태・국가체제는 “民主主義”・“共和國”・“聯邦國家”・“權力分立”・“法治國家”・“社會國家”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던 것이다. 하나 급속한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독일의 건강은 그려 봤지만은 않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었듯이 너무도 통일독립체제를 흡수한 데 따르 는 염청난 “統一費用(25)”의 부담과 이에 수반한 국민의 稅金負擔増加는, 통일독일을 경제 적 위기에서 나아가 정치적 위기에로까지 치달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보수유지업

(24) 評文은 新憲법과 吸收統一의 당연한 결과로 통일 후의 독일 국가형태 및 국가체제는 종전 서독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즉, 기본법 제20조에서 도출되는 통일독일의 국가형태・국가체제는 “民主主義”・“共和國”・“聯邦國家”・“權力分立”・“法治國家”・“社會國家”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던 것이다. 하나 급속한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독일의 건강은 그려 봤지만은 않다. 특히 최근에 문제되었듯이 너무도 통일독립체제를 흡수한 데 따르 는 염청난 “統一費用(25)”의 부담과 이에 수반한 국민의 稅金負擔増加는, 통일독일을 경제 적 위기에서 나아가 정치적 위기에로까지 치달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보수유지업

(25) 漢국통일체제를 구성하고 통일과정수준으로 살아있지만 해에는 약 1조 마르크(우리나라 1992년 예상의 14년치에 해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단의 사람주의의 유명이 외국인에 대한 조직적 배려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
정으로 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그토록 부정성한 독립의 목표가 사실은 “종속통
일”이었으며 체계가 다른 본단국의 통일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 — 예전비 오래동안의 설정
같은 — 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 예멘(26) — 통일憲法制도으로 合憲統一／單一國家 —
(1) 예멘분할 前後の 狀況
① 예멘분할의 経緯
아라비아반도 최남단에 위치한(27) 세계발전한 예멘의 본단은, 帝國主義時代 그 남부지역
에 대한 영국의 植民支配로서 기간한다. 1517년 이래 오스만투르크의 지배를 받아오던 예
멘은 현지투주세력들이 합쳐진 상태에서도 이슬람(온건「시아」파에 속하는 「자이드」파가
다수를 차지)에 의해 민족의 一體性을 유지하고 있었다.(28) 그러다가 1839년 영국함대의
강점으로 「아덴」항이 투르크의 손란 관함에서 영국의 保護領으로 넘어가고, 1869년 수에르
온하의 개통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덴」을 중심으로 한 “남예멘지역”은 거의 1세
기에 설치는 동안 영국의 屬領이 되었다(이후 1937년 直轄殖民地가 되어 총독이 임명됨).
이후 “북예멘지역”은 1918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이 1차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남예멘지역
과 별도로 독립한 回教君主國이 되었고, 이어 1962년 9월 軍事쿠데타의 발발로 “예멘아랍
공화국(Yemen Arab Republic)”이 선포되었다. 한편 “남예멘 지역”에서는 「남예멘解放戰線
(FLOSY)」과 「民族解放戰線(NLF)」등 남예멘 민족 독립운동조직들의 무력행동으로 1967
년 영국이 철수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전력의 신공상태에서 FLOSY와 NLF간 내
전갈에 NLF가 혼란을 장악하여 “남예멘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South Yemen)”

(26) 통일예멘에 관하여는, 1990년 5월 22일의 통일선언 이후 국내에서도 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질의 분석자료로 참고한 대표적인 문헌들은 아래와 같다.
법학분야에서 예멘에 대한 연구는 흔히 많으며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가장 언급되는 정점에
104-106쪽). 다만, 최근한 센여나의 張明秀 교수는 “統一憲法制通和, 合意統一의 이론
南北예멘의 경우가 建立統一過程의 경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기각이 될 것이다”라는 논지는
전략적이었다(한국일보 1992. 5. 19).
(27) 이 지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경계지역인 동서에 기독교문화와 이슬람문화의 절충지역으로서,
인도와 동쪽을 연결하는 “만다바르(Bab el-Mandeb)”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예멘은 천사의 봉건체제에서는 정치적 중요성을 군사적 전략적 가치를 갖는 국가였다.
(28) 이 시기 예멘정부의 주요 권리는 오스만투르크에 있었으나 사실상 투르크의 독자적인 自治行政
권으로 바꾸었겠다. 예멘우등은 하나의 통합성태를 하고 있다는 “이슬람共和體(Umma)”의식
을 강화적으로 지니면서, 이후 남북의 전격적인 분단에도 불구하고 “政治國界는 있으나 生活國界
은 없는” 환경에서 실행하게 된다.
(29) 북예멘 정권은 통해 FLOSY를 완고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NLF의 남예멘 정권 장악이후에도
「아덴」을 근거지로 북예멘 지원하에 反政府活動을 계속하게 된다.
울 선보하게 되었다(1970년 헌법제정시 "예술민주주의인민공화국(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Yemen)"으로 개칭).

② 분단상황의 향후

약 20여년의 분단기간 동안 양국의 정치체제는 내부의 权力闘争으로 인해 정치제도자에 대한 許多・積極・배려가 반복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ii) "남레비"의 경우(34) 1967년 NLF지도자인 "샤바비(Qahtan al-Shaabi)"가 쿠데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큰 실패하여 사임하고, 1969년 "투바이 알리(Salem Rubayi Ali)"가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투바이 알리" 대통령은 1978년의 무혈쿠데타에 연루되어 "가쉬미" 압살혐의를 쓰고 정치인 M-L부대주의자들에 의해 체포되고 만다. 이어 改革派의 "이스마일(Abdul Fattah Ismail)"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서 징구 "예멘사 회당(YSP)"내에 "保守派"와 "改革派"의 권력투쟁이 격화되어(35), 1980년 "이스마일"이 실


예제의 경우, "Imam Yahya(1904~1943: 반대파의 의제 안설령")와 그의 아들 "Imam Ahmad(1948~1962: 쿠데타 이후 사망)"로 이어지는 "자이드 이맘"세습통치는 AD. 9세기 이래의 이슬람청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슬람 "순간"과의 쿠데타제도에 상응하는 것이다.

(32) 이후 약 8년에 걸쳐 共和派와 王家派간의 內鬪이 지속되었으며 "아랍연맹(Arab League)"의 중재로 평화를 회복하였다.

(33) 15명으로 구성되는 大統領評議會 설치, "수파"議會를 128명에서 159명으로 확대시키고 全体대표 31석 배정, 일기 4년의 대의원 1,000명으로 구성되는 中國式 全人民大代表를 2년마다 개체.


(35) ○ 保守派(سعد파)의 정책：4대인구의 북예멘에 흡수되지 않기 위해 남예멘이 경제적으로 발
각하고 보수파의 '알리 난세르(Ali Nasser Muhammad Hosni)'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한 당대의 연합을 1986년 '알리 난세르' 대통령의 유혈 투쟁을 비판한 시기로, 쿠데타 실패 후 '알리 난세르'가 북예멘에 도주하고 개혁의 '알 베이드(Salem al-Beedh)는 유혈사태로 조속히 수습하고 YSP의 서기관에 취임하였으며, 대통령직에는 '아다스(Haidar Abu Bakr al-Attas)'가 취임하였다.

(2) 예멘통합의 진행과정

남북예멘이 통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된 것은 아이디어로도 1972년의 "국

명전쟁"이었다. 아랍연맹 특히 이집트와 리비아의 적극적 조력으로, 양국은 협상을 위해 "카이로협정(1972. 10. 28)"을 체결하고 한달 후 양국 수뇌부가 회동하여 통일국가의 기본요원을 담은 "트리폴리장명서(1972. 11. 28)"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트리폴리장명서" 상의 사회주의적 경향은 "이란"을 지지하여 이슬람국가의 전설을 추구하던 북예멘의 북부

부족들을 실망시켰으며, "이란토" 이후 양 문제에서 압도된 통합안은 유명무실화 되

(36) 남북예멘의 통합과 따로 '서아비'주도의 NLF내전이 치열하다 북예멘으로 도피한 NLF구성원과 FLOSY세력들은 1970년대 초반 일부 부족세력과 제대로 정착되면서 남예멘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었다. 이들로 북예멘이 저항함에 따라 내규모의 "국면전쟁"이 일었다. 북예멘은 1973년 '카마산'을 무대로 장악하면서 양국관계는 치열한 상태로 되었다. 이후에도 방합하

(37) 단일국가로서의 15개조 "국면전쟁"이 발생한 이 협정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1조 - 양국의 국가적 개성이 허용된 하나의 통일예멘의 수립. (2) 2조 - 담당의 국면과 관용

(38) 이 시점에서 남예멘의 '루바이 알리'와 북예멘의 '이란토'는 동일국가의 기본적 성격을 관

에 다음의 내용에 합의하였다. 1. 국면은 예멘공화국, 예멘공화국의 발전국적, 감독은 '서아비', 국면은 아랍의, 전략에서 국면구현. 2. 국면은 이슬람, 이슬람정권 '사리야(Shariah)가 일방

의 주요 원칙. 3. 국면과 함을 이슬람정권의 수립과 사회주의의 실현. 4. 정치적 성격은 사회적 발전과 성장의적 여론, 국면적적 사례, 소구의 보호. 5. 통치체제는 민주·민족·공화국. 6. "이란"의 제도 및 사회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적수를 포함하는 단일 정치조직 구

성, 이를 위해서는 리비아적 사회주의가 표준이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비롯한 8개 "한국정부"를 구성하여 명단을 신고하면서 조속한 "한국정부"에 분할하였고, 통합을 수용하였다.
고 말했다(다만 이 양 문서상의 통일원칙은 이후 통일논의와 통일정체의 근간이 되면서 통일원칙에 이르기까지 반영되고 있다). 흥사우의와 「합의」의 점검 이후에도 1977년 2월 "가리비"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통일정책은 계속 추진되었으나 지지부진하였고, 이어지는 「가리비」체계과 「.getServer.error.entity</raw_text>
6부 121조로 수정된 “애엔공화국 헌법”과 “애엔공화국 공시화물 협정”에 대해 양측 입법부(「슈라」議會와 最高人民議會)의 승인을 받은 후, 양측 통일폐는 1990년 5월 23일 '아덴'에서 애엔統一을 선언하였다. 453

(3) 애엔의 통일방식

통일 이전의 남북애엔의 통일법 제 1조(444)와 북애엔의 통일법 제 6조(445)는 각기 통일을 국가는 하나로 규정하였고, 1970년대부터 통일에 관한 여러가지 협의를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통일입법은 큰 20년간이나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서는 국제적·내국적의 세력의 존재·양국·国内政治의 혼란·애엔·部族主義의 분열적 측면·(통일협상을 진행하면서도·내각·紛爭이나·반정부 세력을 이용하여·武力挑撥을 일으켰던) 애엔정부의 부득이 없는 행동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애엔정부 통일·통일·통일·통일 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북애엔의 통일정책은 “이슬람教理에 입각한·政治体制에 의한 통일”인데 반해, 남애엔은 “함께 주의에 입각한·赤化統一”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통일을 가능하게 할 요인으로는, 남북애엔의 경제적 낙후성으로 인한 동일의 현실적 압력(「経済の要因」(446))·국경 분리로 인한 동일의 유일(「軍事的要因」(447))·「어마존 멜」의 적극적 통일증제(「國際的要因」(448)) 등을 들 수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애엔 정부의 변화라는 “政治的要因”이었고. 동구와 소련이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사회주의양의 통일운동을 추진하면서 개혁·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449), 양측의 통일이념이 사라지지 못하고 동일도 가능해진 것이었다(이 점, 특히의 경우 국민의 무협정성으로 동측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려고

중에 관한 40개의 이르는 벤인을 승인·채택하였다.

(43) 여기에서는, 1982년 1월의 헌법과 관련한 검토·통합서·政治体制의 기본구조·複数政黨制·동

(44) 여기에서는, 1990년 5월의 통일협정서 발주·통합서 30개월간의 파도기 선정·5명으로 구

(45) 1990년 5월 통일협정서 영향으로 남북애엔간 헌표統一을 합의하였고(「統一：더나르동 21:1의

(46) "애엔민주주의민공화국은 통일된 민주애엔을 추구하는 민주적·民衆의·主權．共和國이다.

(47) “애엔의 경제적·정부의 통일을 할 수 없으며 애엔統一 실현을 위한 노력은 모든 국민의 신분한 의무이다.

(48) 애엔의 국내정치의 혼란은 남북이 연결되는 수지에 있어서의 부정할 수 있는 경제건강 및

(49) 남북애엔의 통일협정서는 상호경제적을 초래하기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에 필요한 성공을 가능케 하는

(50) 이 지역의 협정에 따른 용인·배상의 개방으로 중동지역이 양국의 각각으로 되는 것을 우려하여,

(51) 1980년대 말의 "애엔민의 휴식"로의 대표자가 불공하는 다음 시대의 정책들이 집권 YSP

"아메로부터의 민주화"로서 통일까지 이끌어 나왔던 데 반해, 예멘은 집권층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하고 양측 통치권자들의 합의로 통일을 이룩하였다는 큰 차이가 있다.

두께보다도 예멘의 통일은 양측 정치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큰 특징이 있다. 양국은 어느 쪽도 절제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었던 계발국기이었고, 남예멘 집권층의 신속한 개혁으로 세제의 불안을 막았던 점으로 인해 "흡수"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통합"의 모든 경제는 "합의"에 의하다. 이렇게 이루어진 "합의"는 곧 알라자가 뜻하는 "합의"통일을 추진하게 한 조건으로 되어있었다. "합의"는 예멘통일노력의 전 과정에서 "통합"이 제도적 모니터링으로 나타났다. "카이로협정"에서 "야란에야"의 이르기까지 각종의 합의문서에서는 통합이 제도적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주된 일상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결국 통합에 예멘의 통합은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로부터의 합의"에 의한 통일은, "상태있게"를 뒤로 날게 하는 것"이라는 통일을 초대 대통령 고스만 호이의 통일철학이나, "예멘의 통합과 국민을 위해 2인의 지위를 가비이 수락하였다"고 한 (전 남예멘의 YSP서기장) 통일예멘 평통령 '알 레반드'의 말에서, 그 특징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전반에 조속히 통일을 선포하기로 합의하면서 "예멘의 통일은 어느 한사람의 선택이 아닌 예멘 국민의 운명이자 숙명이라는 점에서 통일발신이 국민의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 통합을 성립하던 시한은 "위로부터의 합의통일"이 갖는 민주적, 정상적, 한계도 정정하고 있다.

통일예멘의 정부조직에 있어서는 사무체계인 인구나 GNP가 남북간 1:4의 비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예멘의 거의 1:1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통합에 있어서 대통령・대통령 공동회의 의장 2명, 총리 2명, 장관 19명이 배정되었고, 남예멘의 경우 2명, 대통령・대통령 평의회 의장 1명, 총리 2명 장관 15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특히 외교와 국방부문의 인사는 1:1의 배분원칙이 잘 반영되었다. 통합 회의의 경우 북예멘 159석, 남예멘 111석, 부족대표 31석으로 구성되었고, 국회의장은 남예멘에 배정되었다. 또한 군사 의회는

(52) Koran 3:159,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5인의 "대통령 평의회" 집단제도에게 역시 만장일치의 이승렬 휘하에 기인하는 것이다.

(53) "카이로협정" 제 4조 참조.

(54) 총 131조의 이원법, 제 1부 "국가의 기구"(제 1장 정치기초, 제 2장 행정기초, 제 3장 사회문화기초, 제 4장 국방기초, 제 1조～제 25조), 제 2부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제 26조～제 39조), 제 3부 "국가의 기구의 조직"(제 1장 의회, 제 2장 대통령의 의례, 제 3장 국무원, 제 4장 재판기구, 제 40조～제 119조), 제 4부 "법원과 검찰"(제 120조～제 128조), 제 5부 "한국과 한족, 재외, 국민"(제 128조～제 128조), 제 6부 "서양통치 및 일반 규정"(제 129조～제 131조) 중으로 이루어져 있다.
야의 통합을 가능하나 정치·사회문제의 통합은 단시일에 불가능한 것이므로 양국은 통일 선언이후 30개월의 과정을 설정하였다(남북한측 7년, 북한측 1년 주요들로 7년). 결국
جمهورية의 통일방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통일 쟁점 문제를 통한 1:1의 합계통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통일 메니 오의 국가형태 및 국가체제

“카이로協定”과 “트리폴리聲明書”에 독립된 통일메니의 국가형태 및 국가체계는 이후 1982년 1월의 “憲法案”으로 그 공격이 유효되면서 통일메니공화국 헌법으로 이어졌다. “카이로協定”에서는 “한국의 統一 메니 국가(제 1 조)”수립의 통치체계로서 “民主·民主·共和制(제 3 조)”에 합의하였고, 이어 “트리폴리聲明書”에서는 민주·민족·공화제를 제한하면서 “民族(예멘공화국)·民族(적복합 3개)·首都(이슬람·국적(아랍어)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이후의 통일憲法案에 대로 그대로 연기되었다.

통일메니의 국가형태는 “單一民主共和国”이다. 즉, i) “예멘공화국은 분리할 수 없는 単一국가이다(헌법 제 1 조).” ii) “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國民投票와 選挙을 통해 주권을 직접 행사한다. 국민은 또한 立法·行政·司法機関과 선거로 구성된 地方機関을 통해 주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한다(헌법 제 4 조).” iii) “예멘공화国(Republic of Yemen)”이란 헌법상의 공식 국호는 君主制를 부인함을 명시한 것이다. (55)

다만, 국내의 논문 중에는 통일과 관련하여 메니의 국가형태를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다. 메니 통일을 “聯邦制 통一”(56)이라고 하거나, 통일형태를 “國家聯合”이라 보는 견해도 그것이다. 그러나 이는 “統一에 이르는 方式”과 “統一後の國家形態”를 혼동한 오류이며(57), 통일방식이 앙고라에 의한 것이라고 물론 통일후의 메니 국가형태는 문명의 君主國에. 제 1 조의 명시적 규정 이외에도, 헌법은 地方機関 및 地方議會에 관한 내용을 “立法事項”으로 하고 있으며 (제117조~제119조) (58), “憲法案改正”에 관한 제129조도 地方의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더욱이 통일선도진의 “예멘공화국 宣布合意書”는, “…헌법 제 1 조는…統一國家의 類型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통일은 南북 메니에 기존하는 두개의 國际의 主體가 만일 입법·사법·행정부를 가진 예멘공화국이란 單一 國際의 主體로 되는 完全統合形態의 통일입니다. …”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55) 헌법상 君主制 부인을 명시하고 있기는 않으나, 앞서 “트리폴리聲明書”에서는 군주통치·이념 제도·식민주의 통치에 대거를 제기하고 있으니, 이에 대응하기 위한 單一政治 조직 구성에 합의하고 있었다.
(56) 혁명당, 앞의 글, 143-144쪽과 155쪽 참조.
(57) 통일전쟁의 과정에서 外交·國防문제가 우선적으로 통합되고 기존의 정치구조들이 중앙정부로 통합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單一政治 조직의 구성에 합의되었다.
(58) 전방국가의 경우 支政과 聯政의 관계를 “憲法案”에서 저점 규정하여, 국가연합의 경우는 條約체 제의 문제로 된다.
통일어민공화국의 체제와 이념에 대해서는, “민족主義”・“이슬람主義”・“社会主義”의 세 가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i) 먼저 “民族主義”의 개념에 관해서는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협의문서에서 수차례에 걸쳐 강조되었음에도, 선언서의 국가정보에 명시되지지는 않았다. 다만 “軍隊는 전체民族에 귀속되다(제22조)”나 “大統領評議會 委員은 예멘인이 아닌 婦人과 결혼해서는 안된다(제85조 4호)”는 등의 규정에서 민족주의요소가 간접적으로 비춰지고 있을 뿐이다. 예멘을 틀라한 아랍세계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 달리, 민족主義觀念은 주로 도시의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에 국한되고 일반 민중은 “자신이 소속한 部族과 일라神에 대한 忠誠(religious and local)”만을 알고 있을 뿐이며, 중동의 민족主義와 軍部에리트가 이들에게 국가의식을 불어 넣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ii) 한편 “이슬람主義”와 “社會主義”의 양 이념은 20여년의 분단기를 통틀어 북예멘과 남예멘 양측이 평행하에 대립하였던 부분이었다. 초기의 “카이르協定”이나 “트리폴리聲明書”에서 합의된 국가정체는 “이슬람主義”가 “社會主義”이념에 비해 비교적 격 떨어져 있고, 남예멘의 개혁으로 “社會主義”이념이 약화됨에 따라 "統一憲法"에서는 국가이념으로 “이슬람主義”가 명문화 점진적으로 강조되었다. 즉, “예멘 국민은 아랍 및 이슬람세계의 일부(제1조)”으로서 “國教는 이슬람이며(제2조)” “이슬람法(Shari'ah)가 모든 법령의 근본이 된다(제3조)”로 규정하는 동시에, 제6조에서 국가경제의 원칙으로 “이슬람社會主義”와 “이슬람전통과 예멘사회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자립국가경제건설”을 규정하였다.

iii) 또한 초기의 협정들에서 강제도 보였던 “社會主義”이념은 통일협정상 현저하게 약화되며, 경제분야에 관한 제6조에서 “私有權의 보장”과 함께 “社會主義의 안경계의 설정”을 규정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이 점 과거 “트리폴리聲明書”상 “貿易外的”私의 所有物 보호를 기본적 합의사항으로 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며, 과거 남예멘연방 제7조의 “労務人民의 獨裁실시”와 “NF(NLF의 후신)의 政治的 領導” 등 규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5) 評價과 展望

예멘의 통일에 있어서는 “憲法制定에 의한 領導者의 合意統一”을 달성한 양국 지도자들은 정치의 懸疑가 통일과정에서 뚫려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예멘의 자존심을 세심히 고려한 “북예멘족의 비리”(예멘 때 1:4의 국력격차에도 불구하고 1:1

(59) 이슬람법(Shari'ah)는, 알리의 제시를 기록한 『Koran』과 예멘세의 기록서인 『Sunnah』,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통학자들의 체계적 재조직과 초기 이슬람사회의 판례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상 자기관경성을 갖춘 복합의 규범으로서 이슬람국가의 최고규범으로 되어 있으며, 이 "시리아와"는 法학인 분석에 배려하며,倫理學이라는 복합적 성질을 지닌다는 바, Max Weber는 "法의 理念形으로서의 이슬람법은 "合理的 法判斷(rational—legal judicial decision)에 대응하는 "宗教的・道徳的 判斷(religious—moral decision)"으로 이익하였다.
의 통일에 합의나 사회주의 몰락의 세계현재를 실존히 포착하여의로부터의 개혁을 서두른 "남북한측의 침체"가 다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영원히 통일에는, 동일과정에서 드러난 예언에 부착할의 분열주의의 우위위나 남북한의 기존 사회주의체제와 이슬람 가치관의 점점은 부정적 요소도 내재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이슬람이라는 양국의 국가적 개성이 "융합"된 통일을 이룬다는 "카드로양팀"의 합의는 통합협력에서 이슬람주의의 강화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양측의 격렬자(이슬람원리주의자들과 극권사회주의자들)는 공히 통일협력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60)

3. 중국 (61) — 특별행정구 설치의 기본법 제정으로 수호 통일 — 중일 —

(1) 중국의 분할과 통일 정책

독일의 통일이 비슷한 시기인 1990년 4월 4일, 또 하나의 분단은 1997년 7월 1일부터 주권이 회복되는 홍콩의 지위에 관한 법률 즉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과시킴으로서, 하나의 국가내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가지 제도를 인정한다는 이론과 "일국양제"라는 그 내용의 방식에 입각하여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발전을 응용해 달리하였다. 분단조국의 통일협력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앞에 두고,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은 최근 국내 법학자들에 의해 주요 논의되어 왔지만,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64) 우리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근재에는 정상협력도 이루어진 바 있는 중국의 통일방침과 관련된 법적 조치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점에서는 중국식 통일방안이라고 할 어른바 "일국양제"방침에 관해 검토하고 또 그 구체적 적용인 "홍콩기본법"의 제정 법적

(60) "베트남환국 법정"과 "베트남공화국 공헌법"에 대한 승인에 있어, 북베트남측 정부의 전북씨 시점이나 "수하"의파의 성명서는 "알라"의발표로 모두 무효처리는 "을란"을 비롯한 "무효"의 확립을 한 분석 응용해 달리하였다. 또한, 한국의 통일협력이라는 실질적 과제를 앞에 두고, 독일의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문제점들은 최근 국내 법학자들에 의해 주요 논의되어 왔지만, 지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64) 우리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근재에는 정상협력도 이루어진 바 있는 중국의 통일방침과 관련된 법적 조치 및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점에서는 중국식 통일방안이라고 할 어른바 "일국양제"방침에 관해 검토하고 또 그 구체적 적용인 "홍콩기본법"의 제정 법적

(61) 중국의 통일협력은 관련 국내의 연구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국의 통일방안인 "일국양제"에 대한 법학보의 국내문화의 현황에 있는 현황에 대한 기조 조언은 없다. 분점에서는 중국의 실무와 기관성과 제도에 나타난 자료 및 단행본으로서 채택한 "중국의 통일협력"의 "중국의 통일협력"슈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62) 중국국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분단국이라 하기에 그 규모에 있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분단"이란 용어보다는 "분단"이란 용어가 더 적합할 것이다. 다만 홍콩, 마카오와 중국의 문제를 식별하는 "다와"의 '공유적'에 비교한 논의들이 있어 흔히들된다. ("Hong Kong: David and Goliath", The Economist. 1990. 10. 15~19; R. D. Cremer, "Hong Kong, Macau,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 David and Goliath Relationship?", Asian AFFAIRS—An American View, Fall 1991

(63) 1990년 4월 4일 제 7기 정권인대대회 제 3차 회의 통과. 이하 "홍콩기본법"이라 약칭.

(64) 중국은 한반도 분단국적의 제도안건이라 한 한국통합의 창건국이며 현재 협력국 당국국으로서 (남북한협정협 정)는 중국후 사림관인 피터성(피터성)과 서명하였음). 소련이 통과된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다.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一國兩制"이론은 법학에 대한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는 현재 중국의 상황에서 법학 특히憲法學의 연구대상으로 무의보다 먼저 거론되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각종의 학문과 과에서 "一國兩制"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65), 천법학의 발전현황을 소개할 때에도 "一國兩制"이론이 1차적으로 거론되고(66), 나아가 "一國兩制"하의 법체 문제점에 관한 연구가 "國家第七個五年計劃"기간의 “重点研究課題”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의 통일방안 즉 "一國兩制" 방침에 대해 이처럼 “法的 接近”이 우세한 것일의 전체가 되는 특수상황이 반영된 결과로서, "一國兩制" 방침의 적용대상인 홍콩과 마카오와 개념의 특정시기(홍콩의 경우 1997년 7월 1일, 마카오의 경우 1999년 12월 20일)에 중국으로 귀속되는 데 따른 "法的" 체계적의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또한 근본적의 중대한 부수에 대한 의구심을 분석시키기 위하여 "法의" 체계적 보완이 절실하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논의를 전개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중국의 경우 통일의 전체가 되는 "一國兩制"의 상황과 통일추진의 동기는 되는 "統一目標" 있는 두가지 충돌에서 여타의 예와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의 국가는 제국주의시대 영양의 "法의" 체계적 체계이던 중국과 마카오와 "一國兩制"을 실현한 국민당정부의 대안으로 나누어서 있어 그 분열상황이 "二重的 建構"을 지니고 있다. 앞의 경우 일정시기의 변이가 예상되는 경에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전의 "法의" 체계적 체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제이고 따라서 독일이나 예멘 및 우리의 예와는 구별되는 상황인 반면(67), 후자의 경우 "一國兩制"이란 의미로 허용하는 극한상황을 예상하였다는 점에서 과거 예멘이나 우리의 분단헌정과도 유사성이 있다. 한편, 중국이 제시하는 "一國兩制"방침에 의한 통일은 그 추구하는 유사의 "法의" 체계적 체계, 생산력을 활용하여 사회주의체제와 통일봉토의 현대화와 경제적 부흥을 목표로 하는 바, 사회주의체제의 자본주의체제로 종속이 없음을 뜻하는 "一國兩制"이란 "統一費用"이 문제시되던 독일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 "一國兩制"方針의 展開

① "一國兩制"方針의 形成

"一國兩制"구상의 주요부분은 "중국의 실제상황에서 출발한"라는 이론바 "實事求是"노선이 나사 강조된 1978년 2월의 중공중앙공사 제11기 제3차 중앙전체회의 이후 정

(65) 盛崇德・王同明・宋仁, 中國憲法學教程, 人民法規出版社 1988, 84쪽에서는 "一國兩制"을 실제상 최대의 통일전선이라고 시각하고 있다.

(66) 中國法律年鑑 1988, 法律出版社 1988, 724쪽의 譚龍培・聶新志의 반법학 현장시키 참고.

(67) 통일의 통일은 Bonn기본법 제23조에 의한 "吸收統合方式"이지만 통일 그 자체가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거나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소련・동구의 변화에 따른 政治의 "衝突"이 있다는 점에서, 과거 "法의" 체계적 체계를 사전에 요구되는 홍콩・마카오의 경우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 점 예멘의 경우도 독일과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차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8) 국제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국적으로는 "문화
혁명 종결" 후 실용주의가 확립되면서, 중국공산당은 마침내 차후 대만을 "解放"시킨
다는 판점을 바리고 "和平統一" 방침을 제작하게 된 것이다. 이 중 정식으로 관계가 성립된
1979년 1월 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공민에게 알리는 글"(告臺灣同胞書)
을 발표하여 중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대만의 현재 상태와 대만 각계인사의 의견
을 존중하고 공평·합리적인 정책과 방향을 제작하여 대만 인민에 손해를 기치지 않을 것"을
발표하여 "和平統一" 방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68) 이어 다음해인 1980년 2월 15
일 통일전선 당당기구인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全國委員會는 "대만公民에게 보내는 구정
문서 서신(致臺灣同胞同胞敬問信)"에서 본토와 대만간 郵政·通商·通航 즉 이른바 "三通"
을 실현하는 주장을 제작하였다. (70)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32주년 기념일 전야인 1981년 9월 30일 奉劍英은 "대만을 조
국에 회귀시키기 통일통일을 실현하는 방침과 정책에 관하여 (關於臺灣回歸祖国實現和平統一
的方針政策)"라는 글을 중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이론과 "九條 聲明"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은 "두 개의 중국"에 반대하고 "한나라 중국이"로 정립한다는 기본정책에서 중국의 통
일정신을 이어내도록 구체화시켜 표현하고 있는 바, 이 성명은 실현할 "一國兩制" 정책
는 없었지만 실제로 그것은 "一國兩制" 사상에 입각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72)

② "一國兩制"方針의 具體化・規範化

(68) 鄭小平, "一國兩制的構想是能移行得通的(1984. 7. 31)", 中央社會主義學院統一戰線理論教材
院, 앞의 제, 15년에서 제인용.
(69)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 "告臺灣同胞書", 人民日報 1979. 1. 1.
(70)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全國委員會, "致臺灣同胞同胞敬問信", 人民日報 1980. 2. 16.
(71) 中華人民共和國 全國人民代表大會, "告臺灣同胞書", 人民日報 1979. 1. 1.
(72)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 全國委員會, "致臺灣同胞同胞敬問信", 人民日報 1980. 2. 16.
“一國兩制”의 개념은 1982년 9월 대치 영국수상과의 회견중 鄧小平에 의해 최초로 제출되었는데, 이 회견에서 鄧小平은 “一個國家 兩種制度”의 방안을 사용하여 홍콩의 주권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던 바 있다. 이어 1982년 12월에 개정된 中華人民共和國憲法(소위 實用主義憲法 혹은 鄧小平憲法)은 “序言(憲法前的前文에 해당)”에서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한 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통포를 포함한 전중국인민의 신성한 임무이다(⋯⋯是 中華人民共和國的神聖領土的一部分. 完成統一祖國的大業是包括臺灣同胞在内的全中國人民的神聖職責⋯⋯)”라고 선언하면서, 따로 제31조를 두어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特別行政區를 둘 수 있다. 特別行政區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학계적 정황에 따라 中華人民共和國의 법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다. 1982년 헌법에 대한 헌법수정위원회의 부수인 前 略의 보고는 “…우리는 국가의 주권과 통일 및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는 원칙면에서 절대로 예외도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학계적인 정책과 조치 면에서는 아주 신중되게 대만지방의 현실과 대만인민 및 각 방면 인사들의 염원을 충분히 고려한다.”라고 제31조를 설명하고 있다. 


(3) “一國兩制”方針의 內容과 問題點

① 適用範圍의 內容

앞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원래 “一國兩制” 구상은 홍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1997년 홍콩의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측과 협상을 계속하는 도중 중국정부는 홍콩마카오문제와 대만문제를 “一國兩制” 방침의 범위내에 포함하여 함께 다루기 시작하였다. 1985년 4월 영국 前수상과의 회견시 鄧小平은 “⋯⋯홍콩문제의 해결은 대만문제의 해결에 충

(73) 魏大年, “一國兩制構想的形成及發展”, 中央社會主義學院統一戰線理論教研室編, 앞의 제 61번에 게재추.  
(74) 張 桂, “中華人民共和國 一國兩制政策에 관한 보고(1982. 11. 26 제 5기 中國人民代表大会 제 5차 회의)”, 中華人民共和國憲法(朝鮮文), 民族出版社 1986, 63-64쪽.  
(75) 魏大年, 앞의 문단, 61번 참조. 이 회견들의 내용全部은 中央社會主義學院統一戰線理論教研室編, 앞의 제 9-10번에 게재추.  
(76) 魏大年, 앞의 문단, 62번. 삼화 “政府工作報告”의 관련 부분은 人民日報 1984. 6. 2. 보도 참조.  
(77) 鄧小平, “一國兩制是根據實際情況提出的構想”, 28쪽.
전작용을 할 것이다. 우리는 장차 홍콩문제를 해결한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78) "一國兩制" 방침이 홍콩·마카오 뿐 아니라 대만에도 포괄하여 적용될 동일 정책임을 명백히 하였다.

“一國兩制”란 말은 “一個國家兩種制度”의 준말로서 영문으로는 "one country two system"으로 표기되는 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대만의 12억 인구는 사회주의제도를 실행하고 홍콩과 대만은 자본주의제도를 실행한다”(79)는 것이다. 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주의국가 내에 일정한 특수지구에는 자본주의제도를 허락하여, 단지 한동안의 시기인 아니라 수십년에서 백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변하지 않게 하되, 다만 국가적 주체는 사회주의임을 확정할 것이 요구된다.(80)”는 것이다. 즉, 여기서 말하는 “一國”란 곧 “國家의 主權과 统一”을 지칭하는 것이고, “兩制”라 함은 “中華人民共和國의 主權범위 내에 社會主義와 貨本主義의 두 가지 制度를 并存시킨다”는 것이며, 중요한 점은 이 "兩制"라는 것이 "平行"하는 두 가지의 사회제도 혹은 상호 「對立•排斥」하는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中華人民共和國 總理 廣東성 보중된 社會主義제도가 주체가 되어, 社會 主義와 자본주의의 두 제도가 흡수촉진・공동발전하도록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81)

한편 두 가지 상이한 제제가 공존하는 기간은 대체로 “50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의 선택에 대해서는, “50년이라는 기간은 무작위하게 감정적・충동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과 발전의 수요를 고려한 것”(82)이며, “50년이란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서 중국이 50~60년 이내에 높이 現代화를 실현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83)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② 國家形態・國家體制의 問題

중국식 통일방안이라 할 "一國兩制"는 그 내용이 "國家의 문제와 "體制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 점에 그 특성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一國兩制" 방침이 내포하는 국가 형태 및 국가체제의 의미나용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1) 國家形態의 면에 있어서 中國政府는 "二개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견지에서 일관되게 "單一國" 형태를 주장하였다.(84)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대만・홍콩・마카오 등지에는

(78) 鄭小平, "將按解決香港問題的方式解決臺灣問題", 人民日報 1986. 4. 19.
(80) 肖階文 主編, 聞的 話, 5면.
(81) 肖階文 主編, 聞的 話, 5면 장조.
(82) 鄭小平, "一國兩制是根據實際情況提出的構想", 29면.
(83) 鄭小平, "一個意義重大的構想", 轟刊 "瞭望" 1984. 10. 15.
(84) 독재 제기되어 은 중국의 통일방안으로는, i) 中國의 内部정부가 둔각 일관되며 주장하 온 "三民主義統一中國論", ii) 中國의 분열은 두 개 국가의 涯際상황을 아니라 두 개 경제체제의 外際상황이므로 두 개의 대립하는 체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서 수용받는 "多體制國家體制論", iii) 가압과 뒷바구나 자유롭고 내정과 외교면에서 독립적인 노선한 상정적 인함을 구성하는 "中國大聯邦論", iv) 동일 전 일정기간의 平和統一・平和統一상황을 거쳐 UN에
“特別行政區”를 설정하고 그 “基本法”을 제정함으로서 각 주의체제를 존중시키는 데 따르는 “自治權”가 부여되지만, 결국 “一國兩制”가 내용으로 하는 국가형태는 “單一國”인 것이다.

그러나 “一國兩制” 방침은 “國家結構的形式 (國家形態를 의미함)”의 면에서 새로운 모형을 창안한 것으로, 대만・홍콩・마카오 등지의 “特別行政區”에 부여되는 “自治権”은 구법・외교・행정・사법 등 여러 방면에서 연방체 국가의 지방이 갖는 권력을 초과하는 “高度的自治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86) 즉, 첫째로 法制権의 방면에서: (연방체 국가의 경우 각 지방의 법률이 연방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무효인데 반해) “一國兩制”라는 조건하에 “特別行政區”는 “基本法”과 “법적 절차에 근거하여 자주주의제도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사회주의제도의 맥락에서 시행되는 법률과는 “區別의” 것이고, 두 번째로 對外関係의 방면에서: (연방체 국가의 경우 대외사무에 관한 권한이 연방정부에 고유되나) 국제적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권한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있고 “外交事務”는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涉外事務”에 대한 많은 권한을 “特別行政區”에 부여하며, 첫째로 財政・金融 등의 방면에서: (연방체 국가의 경우 화폐주조권이나 환율에 관한 권한이 전적으로 연방정부에 속하지만) “特別行政區”는 財政的 獨立을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거나 화폐금융정책을 제정할 수 있고, 둘째로 司法権의 방면에서: (연방체 국가의 경우 연방대법원의 관점소의 기와 위에서 미치지만) “特別行政區”의 사법권은 당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이며 “終審権”은 각 “特別行政區”的 “終審法院”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87)

한편 응공・마카오문제와 대만문제가 “一國兩制” 방침하에서 통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상황의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중국측은 이를 “自治權”의 범위 문제로 다루고 있다.

(85)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經濟特區”와 “特別行政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는 홍콩・마카오・대만 등에 대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수권을 거쳐 관련된 각 성의 인민대표회의 및 그 상무위원회가 소속 “經濟特區”의 “奮行經濟法規”을 제정할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전법 제31조의 명시적 규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회의 “特別行政區”의 “基本法”을 제정할 수 있다. 현재 廣東省・福建省 안의 深圳・珠海・汕頭 등지가 “經濟特區”로 되어 있다. 山水치 역시 “深圳과 홍콩의 마는 다르다, 深圳에서는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던 바 있다(鄭小平, “一個意義重大的構想”, 20면 창조).

(86) 嚴家其, “一國兩制的科學涵義及其特征”, 紅旗 1985년 9월, 18면.

(87) 嚴家其, 왼의 동, 18-19면 창조.
즉, 대한의 경우 홍콩이나 마카오의 경우와 달리 독자적인 "单独"을 보유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88) 그러나 또 한가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사실은, 중국측에서도 "完全自治"는 "두 개의 중국"에 가까운 것이므로 "自治"에도 한계를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89)

ii)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보기는 "社會主義初級階段理論(90)"을 천명하였던 바, "兩制共存"의 국면에서 주체는 사회주의이고 따라서 사회주의의 존재와 발전이 중국사회에 기본적이고 발전방향을 결정하게 되다고 한다. 즉, "一國兩制"하의 중국사회는 총체적으로 보아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속해 있고, 사회의 기본적 전형 사회주의적이라는 것이다. (91) 결국 중국의 통일 방안인 "一國兩制"가 자본주의의 "併存"을 허용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체 "社會主義의 발전을 보충하고 사회주의적 생산력 발전에 유리하다(92)"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며, 따라서 앞서도 언급했듯이 "一國兩制" 방침은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의 구체적으로는 "4개(공업・농업・국방・과학기술) 현대화 추진"이라는 경제적 모토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iii) 한편 "하나의 국가"내에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를 "併存"시킨다는 "一國兩制"구상에 대해서는 중국 내외적 현실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3) 첫째로, 홍콩・대만의 자본주의가 대륙의 사회주의를 점차 압박・분괴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이 방침이 결국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다는 비판. 그리고 보다 원론적으로 이 방침이 (홍콩・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회복이라는 "上部構造의 政變"을 통해 홍콩・대만의 "經濟基礎を 極端"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하부구조가 정치적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탐식에 모순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서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 공유제에서 기초한 "國營經濟"와 "集體經濟"가 간격적 우세를 점하고 있고, 우리는 탈락주의자로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분명히 주장하는 바 자본주의체제는 이점은 있으나 착취제도・부패격차 등 치명적 악점이 있는 것이며, 하부構造決定論은 넓은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上部構造로부터의 反作用도 고

(89)鄧小平, "中國大陸和臺灣和平統一的設想(1983. 6. 26)", 中央社會主義學院統一戰線理論教科書編, 앞의 책, 9면 참조.
(90)중국이 "社會主義的初級階段"에 처해 있다는 論斷은, i) 중국대륙에서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가 소멸하여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수반한 社會主義經濟制度 및 민주민주주의 독재를 社會主義政治制度가 격립되었으므로 중국사회는 이미 사회주의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ii) 반면 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르면 볼 때 중국의 현대화 사회주의는 未発展・未成熟・未完成의 단계에 처해 있다는 주장과 그 내용으로 한다.
(91)肖開尹 主編, 앞의 책, 11면.
(92)鄧小平, "一個意義重大的構想", 26면.
(93)이하에서 소개하는 "一國兩制" 방침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역비판은, 楊俊瑞, "從香港問題圓滿解決論一個國家兩種制度英明構想", 世界經濟新報(1984. 10. 1)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94 --

리하여야 하는 바 이 방침은 홍콩·대만의 자본주의의체제도를 지키기만 하지 않도록 보증
하고 있다는 등의 논거를 제시하면서 “一國兩制” 방침을 옹호하고 있다.

둘째로, 이 방침이 결국은 “一國兩制”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이
방침이 “共產黨 統一戰線 隱謀”의 일종이라는 의심, 그리고 이 방침이 내용은 좋으나 사실
상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의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중국
은 인민에 속한 것이지 당에 속한 것이 아니고 홍콩에는 “港人治港”의 자치권이 보장되며,
통일전선은 중국 사회주의정치의 “法寶”로서 중국경우가 방범한 통일전선공작을 행하는 것
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국내외의 문제를 공개의·대중의으로 해결할 뿐 “陰謀”를 견제 해용
하지 않으며, 해 보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함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4) “一國兩制”方針下의 中國法制(94)

이하에서는,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가 并存하는 데 따르는 法의 衝突·矛盾現象
물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측의 접근방식을
“衝突法本位”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法律의 基本性格: 비록 “초급단계”기미는 하지만 중국은 “社會主義”사회로 진입했
으므로 “一國兩制”의 조건하에 대통령이 주재가 되는 중국법률은 塊체적으로 “社會主義
의 性格”를 지니며, 따라서 두 종류의 각기 다른 법률제도가 并存하는 조건하에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작용을 하는 것은 社會主義 法律制度라고 한다. 또한 국소수의 “全
國性法律”이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만 이 사실로 인해 홍콩법률은 자본주의적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며, 자본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法律制度”는 “一國兩制”
방침하에서도 기본적성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홍콩 기본법률(보통법·형법법·
조례·부속법률·관습법)의 기본적 성격이 유지되다면 이것이 中國內地 법률의 기본적 성
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며, 이 점에 대해서 큰 염려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홍콩 법규법·제도의 현대화 경험이 중국의 社會主義現代化建
設에 휘수되고 참고될 것이라 한다.

ii) 法律의 體系: “一國兩制”의 실시로 하나의 국가에 두 종류의 법률체제가 并存하는
국면이 되었지만, “并存”이라 함은 “併列(나란히 열거함)”이나 “併重(나란히 중점을)”의
의미는 아니고 社會主義法律體系가 主體로 되는 전체의 “并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러한 체제하에서 중국의 법체제는 “一國兩制三法”의 신체면을 도달했다고 하는 바, 여기서
의 “三法”란 곧 홍콩의 “普通法系”·나카오의 “人間法系”·內地의 “社會主義法系”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특별행정구의 기본법 특히 “홍콩기본법”과 “권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가. 이는 특히 法治이 홍콩特別行政區에 적용되느냐는 문제와

(94) 이 (4)부분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인용된 문헌 외에 靜雲 主編, 앞의 책, 10-42면의 내용을 반
역·요약하여 참고하였다.
관련된 것으로, 헌법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95)와 헌법 제31조는 홍콩 특별행정구에 적용되나 그 의의 주문은 효력이 없다는 견해(96)가 제시되고 있으나, 헌법에 규정된 "4개 기본원칙"·"사회주의제도"·"지방분권기관과 지방행정기관"·"국가자본기관과 국가경찰기관" 등의 내용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적용되지 않지만 "국가주권"·"국방과 외교"·"지도국가리더기관과 육군국가정부"·"국격·국장·서양" 등에 관한 헌법규정은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한다. (97) "홍콩기본법"을 하나의 "소법"으로 보리는 홍콩측 관점은 중국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홍콩기본법"도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하위에 있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98)

iii) 법의 제18절: "한국(한국)" 발행자에 의한 "한국(한국)의 "자유시"""에 의한 "고도의 자유시""를 "한국(한국)의 "자유시"""에 의한 "고도의 자유시""는 거짓말하고 홍콩 기존 자본주의제도의 한계(홍콩기본법 제 5조에 의한 50년) 불변을 견지한다"는 것이며, "한국(한국)"란 이것이 곤 "조국통일과 사회주의계획정전사업의 발전에 유리하고, 홍콩의 경제적 안정과 변형유지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콩은 입법방면에서도 중앙정부로부터 "기부"받은 "고도의 자유시"를 "유지하고 주장하는 바, 첫째로 "민주주의직경의 거짓말사실을 제외하여" "단계별"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은 전국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체계"를 거치지만 이는 그 법률권 효력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99), 둘째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홍콩기본법"에 위배될 때 ("기본법"의 "정목권"은 헌법 제31조의 규정상 전국민대표회의에 있으므로 당해 법률의 "기본법" 위반에 대한 "정목권이" "한국(한국)의 사회주의계획정전사업에 있어야 하지만) 홍콩기본법 제17조(100)는 전국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의 위배여부 심사판에 일정 한계를 두고 있으며, "한국(한국) 기민법"의 "改正"를 입각하여 "改正"이 전국민대표회의 있으나 법개정은 홍콩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존 기본방침·정책과 저촉될 수 있고改正提案權이

(95) 헌법의 "통치자(사회주의재정원과 민주주의주의국제의 재정·중국공산당 영도의 경제·말소-해양주의와 모태동영상 경제를) 소속의 기본원칙을 규정) 헌법 제1조(사회주의제도는 중국의 근본절도로서 어떠한 조건도 이를 파괴하지 못한다) 규정) 헌법 제5조(일체의 법률은 헌법에 제출될 수 없다) 규정) 등의 조문내용이 헌법 제31조에 규정한 내용과 상반되므로, 헌법 제31조에 기초하여 제정된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 역시 이를 헌법조문에 저촉되는 것이어서, 헌법은 당연히 홍콩특별행정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letter from chairman, 91도 찬소).

(96) 김영호 主編, 앞의 책, 91도 찬소.

(97) 김영호 主編, 앞의 책, 94쪽 찬소.

(98) 김영호 主編, 앞의 책, 90면의 홍콩기본법 제11조에 대한 설명 찬소.

(99) 헌법 제17조 참조.

(100) 헌법 제17조에 의하면 이 경우 전국민대표회 사회주의국는 "한국(한국)의 기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후에 관련법률을 발하여 당해 법률을 "효력을실 수 있으나 당해 법률을 "改正"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와 국무원 및 홍콩특별행정구에 제한되는 등(101)의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vi) 법적양의 문제: “홍콩법”하에서 홍콩의 법적용은 “法의 平等”·“法院의 獨立”· “一國兩制의 실시”·“一國兩制의 존중” 등 원칙에 의거한다고 한다. “一國兩制”의(즉, 중앙의) 법률은 홍콩에 적용될 것이라고, “홍콩법”의 “부속법”은 홍콩에 적용될 “一國性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도 국가는 보통법 시험원의 표적은 외교·군사에 관한 법률은 전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홍콩에도 적용되고, 그 외의 “一國性의” 법률 중 홍콩특별행정 구의 자체한 범위 내 사항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형 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등 대부분의 내지법은 홍콩에 적용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

(5) 평가와 전망

“一國兩制”는 “國際紛爭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며 政治學에서 國家論의 결과(102)”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바, 홍콩·마카오·대만의 중국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법적인 측면의 문제점에 우선하여 이 방침이 홍

(101) 홍콩기본법 제159조 참조.
(102) 羅松炎, "一國兩制政論 — 概念·性質·內容·困難和前景", 九十年代 1985. 12, 30-31면 참조.
<table>
<thead>
<tr>
<th>분·단·상·황</th>
<th>통합에 이르는 방식</th>
<th>통합의 국가형태·국가체제</th>
<th>전환기의 설정</th>
</tr>
</thead>
<tbody>
<tr>
<td>독일</td>
<td>공존단계 거침</td>
<td>조약체계로 흡수 (Bonn 기본법 23조)</td>
<td>독일공화국/민주독일/사회주의독일 국가체계</td>
</tr>
<tr>
<td>오만</td>
<td>专辑·특별수용</td>
<td>단일법령을 통한 합의</td>
<td>단일주권사회의 조약 (신법 31조)</td>
</tr>
<tr>
<td>중국</td>
<td>중앙의 전략</td>
<td>특별행정구 설치와 기본 법을 통한 흡수 (천명 31조)</td>
<td>중화인민공화국/중국민주주의자치구/중국민주공화국</td>
</tr>
</tbody>
</table>

제 4장 통합의 단계와 국가형태·국가체제

남북통합문제에 관해서는 그 동안 속하게 많은 종류의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 중에서 제시된 통합모델은 20여 가지가 넘어서(103), 그 대체적 논조는 일관한 통합의 단계를 거쳐 통일에 이르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도 2019년 UN총회 후 기자회견에서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수도국가를 건설함으로써 통일의 종료가 될 수 있다”(104)로 설명하여 3 단계의 통일방안을 시사한 바 있고, 정책적 편향에서도 급속한 통수통합보다는 전전적·단계적 통합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105) 본장에서는 통합의 단계별 단계에서

(103) “통합제” 방안에 대한 대한정부의 “대陸工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원리에 입각한 통합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중화포럼의 통합모델 434호, 4-5월, 참조.


상생가능하며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했던 국가형태나 국가체제의 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일부로 검토하고 또 그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100바치의 통일방안을 분석하여 101세의 통일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부의하더라도 생각한다. 기존의 방안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부터 "법적"의 것으로 바람직한 통일방안의 모습이 드러나리라고 믿는다.

1. 交流・協力段階

최근 남북의 UN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남북협의서"가 체결되면서, 남북 관계는 바야 호로 "交流・協力의 初期段階"으로 진입하는 것처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협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 제3법의 有權解釋은 이를 국제 범상의 "紳士協定"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發放條項"까지 명시된 "남북협의서"를 규범적 구속력이 있는 단순한 "紳士協定"으로 보는 데는 남북관계의 전제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條約" 이러한 "이에 준하는 것으로" 규범으로의 拘束力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108)

그러나 현재로 "남북의 관계"가 "國家間 国家"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特別한 種類의 관계"라는 점을 국내외적으로 수시로 주장・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東西獨基本條約"의 체결 이후 서북축은 동독이 "國家" 이지만 "外國"은 아니라라는 개념적작용을 하면서도 동조적이 헌법상의 再統一・命令에 방치하지 않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입각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제반 정책을 수행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남북협의서"는 통일로 향해 나아가는 "章典"으로서 남북 양측이 그의 拘束力を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남북의 관계는 이를 어디까지나 統一指向의民族間 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 體制聯合/國家聯合段階

(1) 6공화국의 통일정책이라 할 수 있는 "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KNC)" 통일방안은 국가형태의 면에서 "한국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이라는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연합]은 기존 국제법상의 部會聯合(Confederation)이거나 聯邦(Federation)의 古典의 概念이 아니라 통일을 지향한 過渡의이고 特殊한 세 3의 결합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1民族, 2體制의 聯合形態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여

(107) 임재혁, "南北統一過程에서의 政治經濟學的 分析", 韓國政治經濟學會포럼, 轉換期의 南北 韓關係定立, 1992. 5, 30, 21-33명 참조. 다만 이론의 내용 중 "공속학의 基礎統合은 廣義資本 家들의 당기적 이익을 가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훈수통합으로 국경이 철지되며 합리적으로 남측자본가들은 "現地投資"의 형식을 받아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극단적 훈수통합에 따르는 "統一費用"부담의 예견되는 "政治不安"은 남측자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108) 북측을 야의 "國家"로서 승인하지 아니한 우리로서는 "南北協議서"의 성질을 염두한 의미에서 (즉 "國家間의 合意"라는 것에서) "條約"이라고 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제적으로 바람직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두익의 경우 양측관계를 "主權國家間의 關係"가 아닌 민족내부의 "特別한 種類의 關係"로 파악하면서, "東西獨基本條約"를 하나의 국가와 두 부분 사이에서 체결되었는 특이성을 지니는 "條約"으로 보았음은 앞서 이미 언급하였다.

(109) 崔榮植, 알의 군, 53면.
나(110), "…‘南北聯合’을 국가조합화와 통합의 개념과 상호 비교해 보면, 통합을 보다 ‘남북 협력’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이를 기능의 계획에서 보면다면, 여러 국가는 공동생활권을 형성하면서 통합의 성격을 추구하고 국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 EC)’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10)"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파도적 단계로서의 참정권을 지니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남북연합’이 갖는 국가는 통합의 성격은 매우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표기 자체도 "Community"나 "Commonwealth"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도 각각이 출자한다. 법적인 차원에서 이 방안을 살펴보면, "국가조합", "통합체(Commonwealth)"과 "통합체 (Community)", "국가연합 (Confederation)" 등의 개념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i ) 먼저 "통합체"이라는 용어는 이洪九, "통일일원강관에 의한 제일 먼저 제시된 것으로 "1인조국 2개체의 연합형태"를 그 의미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개념 자체에는 통합의 성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국가조합의 차원에서 고전적 분류를 비판하면서 전통 세로운 형태를 창안한 것이라 하더라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양체계의 연합이라는 국가조합이 존재한 적이 없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
국에서 주장하는 "一國兩制" 즉 "1국가 2체계" 방식은 국가조합의 면에서는 이것을 어디까지나 하나의 통합을 기초로 하는 "一國兩制"형태라고 설명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11)

ii ) 한편 "Commonwealth"라는 형태는, "The British Commonwealth"의 전형적인 예로서 알 수 있듯이 고도로 우위의 있는 통합형태의 발아와 그 구성국들은 완전히 독립한 통합의 국가는 통일방안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Community"의 전형으로서 "European Community"의 경우, 유럽의연합 통합의회까지 두고 있지만 그 회원국들은 의약 정사면에서 명백하게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고, 연내나 교통 및 교육을 비롯한 수요생활영역에서 국가간의 경제가 매우 체계화되고 있으며, 최근의 통행단일화도가 각 회원국 내에서 완남을 겪고 있는 현실로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통합에는 어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이고, 따라서 통일의 단일체언어라는 조건하에서 하나의 통합의 국가는 통합가의 타당하기 어려운 예가 아


(111) 우리의 통일논의와 관련하여 최근 "一國兩制" 내지 "一民族兩制" 혹은 "三制"이니 하는 중국의용어가 흔히 쓰이고 있는데, 그 성격하의 사용을 알지 못하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12) "The British Commonwealth"는 영국국왕을 상징으로하여 파거 대영제국의 쓰나미로부터 독립한 국가들로 이루어진 단순한 통합체 내지 "協同體"에 불과한 것이므로, "하나의 국가로 통합한다"는 파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국가로부터 분리・독립한다"는 방식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나가 생각된다.

iii) 가장 범적인 국가형태개념인 "국가연합"의 경우 우선 문제되어야 할 부분은, 비록 그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기에서 논의되는 "전제적"인 국가형태라고는 하지만 북측이 일관되게 주장하지 않다 "분단을 존중화"시키는 국가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다. 현재의 남북상황은 결국 한반도내에 2개의 국가가 국적 법적으로 현실상 존재하고 있는 국면이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주도국가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국가연합"이란 단체를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 국가연합단체를 거쳐 연방국가에 이르는 예로서는 스위스나 미국·독일 등 비교적 오래된 여러에 없다는 사실고, 현재 대표적인 국가연합체로서 '한국연합공동체(CIS; EUN)'의 본질 응용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거나(113),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실은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점들이다.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구체적으로 "경제통합"가 위주로 될 것인데, "南北直交談"에 대해서 최근 미국측은 이를 "GATT개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남북관계"에 이르는 제지하였다고 하였고, 남북교류에 있어 "무역의 핵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남북교류가 "국제통합"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측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114) 또한 남북이 각기 독립한 교류·협력이 지니면서 느슨한 "한국연합"에 소속되다고 할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교류가 실제적으로 없어질 우위에 있어서 재무성을 저두는 일부에 비속 일찍게 되면서 우리와의 통일이 힘들어지게 되어버릴 가능성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는 추측이다.

따라서 범적인 국가형태로서 "국가연합"을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전개 단계가 한계를 명시한다 하더라도 결국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연방국가 단계

"연방국가"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회주의권 특히 북측의 연방제 인식은 이를 "민족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보는 것이 특징이다. (115) 사회주의권의 연방제는 사회주의체제의 몸과 뼈다리 소련을 필두로 유고슬라비아 및 최근에는 체
로슬로바키아까지 "국가연합"의 형태로 분열·체계되어 대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
니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단일어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우리의 경우 사회주의적 관점
세계의 연방체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북측이 주장하는 "통합제"라는 것의 성격이 "연방
국가"인지 "국가연합"인지의 분명함이 이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이 그간 축적을 이루어 왔
거니와,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통일국가 형태로연방체를 구성하는 언해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이 때 "연방국가"는 남과 북 2개의 "지방자치체"로 구성된 연방이 아니라 특히 한
반도내의 심한 지역갈등까지 고려하여 4~5 또는 5~6개의 "지방체"를 갖는 연방체를 구성해
볼 수도 있다..."[117]는 견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권력분할의 한 벽량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가치관에 대한 무용과 타협의 정신 중
고도로 발달된 "민주적 정치"를 기초로 하여서만이 비로소 유지가 가능한 연방제도가, 중앙
집권의 "강제통제"에 이르는 "사회주의의 정치"를 내밀은 우리 현실에 비추어 적합한 제
도인지는 의문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이전에 이미 "연방국가"였다가 "연합이"로 연해
"연합국가" 형태를 유지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연합국가"이어서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이"이 이루어짐에 따라 종전의 "연합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을 뿐이
라든 것이다. 예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연합국가연합"의 통일을 이루었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5장  结  論

1. 종래 통일논의들에 큰 특징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통일의 완성로하 "연합국가"의
모습에 관해서 여러 연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적인 단계에서 상정가능한 각종
국가형태·국가체제 문제에 대해서 "통합"적 상식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이는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해한다는 "능동적"의 "대전"에서 통일문제를 나라보는 데 기인한 경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독일이나 예멘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사회주의의 변화와 함께 "공작소실계" 파가온 것이었고, 외부에서 일방의
국가체제로의 무리한 "수용"는 (특히 독일의 경우) 큰 온난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경우 역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기존의 단계적 통합방식에 있어서의 국가체제·국가
체제논의는 전혀 부의의한 것이 되고 만다.[118] 단계적 논의와 아울러 그러한 통합형태가

(116)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창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방안은,
"당분간 그대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의" 성격을 지녔던 종전의 "연방체" 방안
가서 말기, "협력적" 방안임을 강조함으로써 문제점을 더욱 논의시키고 있다.
(117) 백용규, "통일로 가는 과도체제의 제 형태", 한국교직자학회 통일문제특별대토지, 1989, 2.1
~2. 발표논문, 10쪽.
(118) 이 점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세시되었던 "통합체제체계"와 3단계체계(staatlich연합체제통일)의 구분은, 통합체제의 진행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지향하는 종합으로서 "일국의" 모습도 보다 구체적인 법의 형태로 논의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목표가 설정되지 아니한 각각의 남북간의 동일한 방향으로 이끌고 점차 알 수 없는 것이며, 비판적으로 본다면 최고의 EC의 일국이 중앙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체 남북을 기대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만한 없을 것이다.

2. 한편 앞서 제 4장에서 살펴 본 바대로 과도기적 국가형태의 "목표형"이 타당성을 결
하고 있다면, 통일방안으로서 "일국-국가" 형태를 바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
지 않아 생각한다. (119) 국가형태의 면에서 이리나 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과도적
단계들을 "일국-국가"이라는 국가형태 내에서 소외해 볼 수 있다면 한편 해롭지만 방법이 될
것이다. 즉, 단일국이면서 일정시기의 "통일"을 설정하여 복족의 제도를 어느정도 보장
해 드려면, 급작스럽게 통일이 가속을 흔들어 화학사이트로 또 "수용 통합"이라는 형식에 강
한 거부감을 느끼는 복족의 입장도 다소 고려할 수 있으리라 본다. 통일의 설계에 관해서
는 복족의 정치참여정도 늦게 간언되어야 하지만, 종래 주로 논의되었던 정치-군사
정제 등의 축면에서 인구-인연자원-과학기술 등 "한반도의" 정치生態학의 전반도 고려하여
파학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120) 결론적으로 남과 북 전체적인 입장에서 일국은 통일
의 건설이라는 소건을 면목에 두고 생명을 사활을 해나가는 것에서부터 동급의 첫길을 시
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3. 남북과 복족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국"받서 통일체를 고수하고 있는 한, 그
의 구체가 무엇이란 것이다. 그러나 복족의 체제가 바른 육도로 와해되면서 동일이
금직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경우, 우리는 "현행체제"로써 "사회주의"라는 저질체제에
의속해 있는 복족의 통합을 받아 들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체제"를 "일국"체제로써 남북
인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라도 고려할 것인가? 급속한 흐름통합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남북 어느 쪽 입장이든 "통일"의 "판단"은 필요한 것으로, 이를 고려한 철학의 내용을 미
리 논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예전에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일
국체제"의 내용에 대하여 남북이 서로 논의하면서 동일을 협의하는 것도 동일에 이르는 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일국체제"의 구체적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치들이 제시되고 있다. "...前
에서는 기존의남으로서 (1) 국민주권주권 (2) 기본권주권주권 (3) 민족문화국가주권주권 (4) 국제

(119) 신과 빌레네와의 형식을 취한 "일국-국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예비 및 중앙이 모두 동일을 지향하는
결정에서도 "일국-국가"의 관점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심할 필요가 있다.

(120) 남북통합에 대한 "政治生態學(Ecopolitics)"의 연구로서는 "한반도의 통합의 정치生態학
의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1992년, 184-169번 출판, 이 글의 주장에 의하면, "남
북한의 통합을 가정할 때에는 허리로 남북 두 사회가 모두 "일국"체제로 전환할 필요를 보이고 있는 데다 높
은 "일국체제"의 경우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일국체제"의 경우는 "일국-국가"의 개념을 최신하며, "일국-국가"의

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平和主義은 "福祉國家主義"를 규정해야 할 것이다. ..."(121)"로 하여, "...통일헌법은 남한의 자유원리와 북한의 주체원리의 통합개념을 토대로, 통일국가의 이상적 미래상으로 고도의 "福祉國家"를 설정하고 민족의 소망과 의익이라는 특성소, 인류문명의 기준에 일치한 "통일가치"를 합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122)"는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 견해들은 사실상 북한이 남한의 체제로 완전히 수용된 후 국가체제의 헌법적 모습일 것이다.(123) 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지적했었을 것인데, "통합의" 단계를 거치지 않은 수용한 "통일가치"의 경우 위의 견해들이 주장하는 국가체제를 그대로 헌법에 규정하여 곧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변대 "社會主義體制"를 지향하는 국가의 헌법과 "資本主義體制"에 기초한 국가의 헌법을 종합하여 하나의 협력된 체제의 "國家體制"를 헌법상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어느 한 쪽의 요소를 고려할 수는 있었으나, 예컨대 중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합"에 의한 "통일체제"의 구문에서는 결국 어느 한 체제가 우위에 섰다. 밖에 없고 나머지 체제는 "생활에 대한 자원의 분배(예컨대의 경우)"나 "통합체제의 설정(중한의 경우)" 같은 면에서의 배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남북 양측이 공히 합의할 수 있을 만한 절대적인 "國家體制"이라는 것은 매우 힘든 문제를 것으로 생각된다.
Résumé

Korean Unification and the Staatsform of a State

Young Sung Kwon* · Woo Cheol Shin**

This paper deals with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form" or "system" of a state (Staatsform) to be born upon the unification of Korea.

Following the introductory statements, Chapter Two discusses on the issues of the nature, form and the system of a stat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Out of the impending necessity, socialist perspectives of a state, particularly those of North Korea and China have been heavily studied.

In Chapter Three, the core part of the paper, instances of Germany and Yemen which have recently completed their unification processes, and China which is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For more thorough comparative analyses, special notions have been put on various circumstantial factors—such as political, international, economic, military, religious, and cultural one—both prior to as well as following the separation. To avoid confusion, the two issues, i.e., the issue of "form or system of a state after unification" and the issue of "way of achieving unification" have been distinctively alienated.

Chapter Four scrutinizes potential legal issues as have been or may be raised in each stage of the unification process, with suggestions therefor.

The authors argue that the issue of unification should be discussed more fully as a "legal" matter, and ultimate goal must be laid on building one single nation. As discussed in Chapter Four, in light of various problems as witnessed in the "transition stages", of the above-mentioned countries, direct march to the "single state" might save extra burdens of taking a detour. However, considering the prevailing fear of the North that the South may envisage the "unification by absorption," guaranteeing the "interim period" may pave the way for an easier solution. To shorten the process, starting the negotiation with a pre-arranged "Constitutional Draft" may wind up as a winning shot.

In pure theory, compromising the two documents seemingly of mutually exclusive character, socialistic and capitalistic, towards one single product, may be impracticable, if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not impossible. As have been proved in the cases of China and Yemen, the theory of Social Darwinism will work as an unavoidable reality, one way or the other. The only device will be guaranteeing the losing party of the "interim Period" (China) or "distribution of duties among the constituents" (Yemen) as a subsidiary. Agreement on the cardinal "ideological goal of the nation" of the two Koreas seems to remain as an almost futile hope.